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과제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위한 연구	이종민
수탁과제	2017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	박성남
	2017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신치후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용역	손동필
	저비용·고효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업모델 개발	김은희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은석

수시과제

①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위한 연구

최근 도시 및 교통계획의 정책 패러다임이 이동성에 초점을 둔 도로와 자동차 중심에서 보다 인간 중심, 접근성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녹색교통 중심 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이동수단 등 교통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중교통체계, 물류체계, 신호체계 등 도시 내 가로체계와 개별 가로설계가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에 우선순위가 부여된 가로계획에서 컴플리트 스트리트(Complete Street), 셰어드 스페이스(Shared Space), 슬로우 존(Slow Zone) 등 모든 도로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가로설계 기법들이 해외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제도권 내에 있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지침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계획 수립지침 중 교통 부문의 설계기준과 용어는 1980년대 이후로 변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있다. 즉, 가로망의 설계를 비롯하여 차로수 및 차로폭 등의 규정, 자전거도로 시설 등에 대한 수립지침과 기준이 현재 상황과 가까운 미래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간관리계획 수립지침 중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동등한 도로이용권한 부여, 도시 내 활력 제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중심 환경 조성 등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로망 및 개별가로 계획과 관련된 지침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종민

① 2017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2014년 선정된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2016년 선정된 33곳의 도시재생 2차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17년도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의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 도시재생 정책의 의의와 흐름, 도시재생 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도시재생 사업이 발전된 도시재생 정책 방안들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지원기구 기능 수행을 위한 본 연구 용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수행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선도지역 5곳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시재생 정책 백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경우 선도지역 마중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 효과의 지속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정책 백서에서는 국내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11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실행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성남

② 2017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국민의 한옥과 한옥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한옥진흥정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옥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옥진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한옥홍보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한옥을 발굴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미래지향적 한옥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이전과 같이 ‘한옥 계획’, ‘한옥준공’, ‘한옥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올해는 계획 부문의 주제를 ‘한옥의 현대화’로 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전통적 한옥이 현대적 거주를 위한 건축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근생을 포함한 도시 내 저층 거주시설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적 거주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 ‘한옥 현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하고 열린 아이디어를 요구하였다.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는 미래의 건축인재들에게 한옥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전통 한옥이 밀집한 안동에 소재한 국립안동대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단기간 집중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신청 학생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 달라진 캠프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한옥 교육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협조하여 신규 한옥마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옥 짓는 법’과 ‘한옥에서 사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을 기획하였다. 한옥 거주를 결정한 다음부터 건축과정과 거주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입주자들이 한옥에서 누리는 거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한옥 홍보행사는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주고, 한옥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옥진흥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치후

3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영역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율은 53.9%로 형법범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67.1%가 범죄위험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하는 등 다양한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문제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뿐 아니라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만들어 지역을 쇠퇴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범죄예방 대책마련 요구에 따라 다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물리적 환경개선 치중,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부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 부재, 유지·관리 미흡 등 사업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범죄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단계적 계획안(기초설계안,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하고 건축·도시·범죄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역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과 소요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필

4 저비용·고효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업모델 개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단지 수는 총 14,553단지로 집계되고, 이 중 15년 이상 된 단지 수가 7,637개소로 전체의 52.5%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15년 경과 공동주택의 호수는 매년 30만호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동주택 노후화는 몇 가지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 먼저 거주환경의 질 저하이다.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비위생적인 설비시설 및 마감재료, 층간소음 문제 심각, 에너지 효율성 저하,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부족, 외부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생활공간의 쾌적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둘째,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거주자 안전성의 위협이다. 특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은 재난 발생 시 해당 주택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고, 노후한 내외부 마감재, 구조체는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셋째, 노후 공동주택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장소의 쇠퇴를 유도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한다.

한편 2014년 3개 총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법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현행 노후 공동주택 관리 제도는 여전히 재건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공사 방식이 까다롭고 비용 대비 성능 효율이 낮은 리모델링 사업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동주택마다 입지나 건축물의 상태, 거주자의 소득수준 등 제반 여건들이 달라 동일한 사업 목적과 방식의 적용이 불가하다. 무엇보다 재건축처럼 세대수 증가를 통한 거주자의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경제적 이득 창출 기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낡은 집을 고쳐 관리하며 살아가는 리모델링에 대한 가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복지의 증가, 안전 강화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2015년 9월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15년 경과된 단지는 2000년 12월 20일 이전 사용승인된 단지를 조사한 사항이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한 주거환경 연구개발사업(R&D)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이다. 이 과제는 총 4개의 세부과제(1.설계기술 및 주거성능 향상 기술 개발, 2.구조안전확보기술 개발, 3.사업활성화 제도 및 사업모델개발, 4.증축 리모델링 실증)로 구성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저비용·고효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업모델 개발(한국시설안전공단 책임)'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정책로드맵 구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착수하여 총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정책로드맵 구축 부문은 5차 연도인 2019년에 종료된다.

김은희

가스 감축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연장되어 그에 대한 목표치 또한 변경이 불가피하다. 아직 국가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자체별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전라남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전라남도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쇠퇴현상 등 인구 축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건축과도 결부되어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과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 '생활안전에 특화', '주거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풍부한 자연에너지 부존량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건축 특화 산업 마련' 등 기존 지자체와 다른 시각의 녹색건축 정책 마련을 담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나아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도시 여건을 갖춘 전라남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은석

5 전라남도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용역

그동안 전라남도는 국가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광역지자체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였다. 지난해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이 완수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법정계획 수립 근거가 확립되어 전라남도의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는 '제1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건물 부문은 26.9%를 감축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파리협약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동향이 급변하고 그에 따른 국가정책의 목표치가 다소 변경되어 기후변화 완화 정책 중 하나인 녹색건축 정책도 기존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제1차 국가 녹색건축 기본계획'의 운영기간 중 후반부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국가계획 추진에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곧 있을 '제2차 국가 녹색건축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담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제1차 국가 녹색건축 기본계획'상 전라남도는 2020년까지 건축 부문에서 약 15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나, 최근 국가에서 정한 온실

2017 AURI & KAAH 국제 심포지엄 ‘동아시아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전 정책과 과제’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함께 2017년 9월 9일과 9월 10일 양일간 ‘2017 AURI & KAAH 국제 심포지엄’을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과 아산 외암마을, 홍성 문당리 마을에서 열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전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최근 지역의 특수성과 공동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마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현대 주거공간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오래된 마을’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공동체 삶터, 환경 친화적 삶터로 주목받고 있는 전통마을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9월 9일 심포지엄 1일차에는 한국·중국·일본·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마을 연구자, 정책 수립자, 실천가들의 7개 주제발표를 통해 각국의 전통마을 보전·관리·재생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중국 중난대학의 미리(米莉) 교수가 중국 전통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딜레마에 대해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일본 오카야마공과대학의 야오이타 기호(八百板季穂) 교수가 일본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과 관광경영 정책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뒤이어 일본 문화청의 무라카미 가요(村上佳代) 조사관이 일본의 문화유산 보존 정책과 이슈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였다.





또 베트남 국립건축원의 파티황반(Ta Thi Hoang Van) 교육 및 국제협력센터장이 네 번째 발표를 맡아 하노이 전통마을의 공간, 건축 및 경관 관리와 보존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이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황테푹(Hoang The Phuc) 문화유적 담당관이 베트남 고대마을(Phuoc Tich)의 보존과 홍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이 한옥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옥마을을 둘러싼 정책의 흐름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가 마지막 발표를 맡아 한국 역사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를 설명하였다.

발표 후에는 서울대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를 좌장으로 동아시아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전통마을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9월 10일 심포지엄 2일차에는 아산 외암마을과 홍성 문당리 마을 현장답사를 통해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적·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한국 전통마을이 지닌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치후

2017 AURI 건축도시포럼 - 한일세미나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최전선: 변화와 각오'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2017년 9월 27일 서울 상생장에서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최전선: 변화와 각오'를 주제로 '2017 AURI 건축도시포럼 - 한일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공적자금을 민간의 자생적이고 내발적인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이 새로운 대안으로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감당 가능한 규모와 예산으로 지역재생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최전선에 있는 주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시재생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민관협력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행사의 문을 열었다. 윤주선 부연구위원은 공적 보조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도시에서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의 역할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바바 마사타카(馬場正尊) 대표(주)OpenA)가 말하 '민관협력 도시재생을 위한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바바 마사타카 대표는 빈집, 빈 점포가 급증하는 시대에 건축 전문가가 직접 취재하여 지역과 건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파해 주는 부동산 편집숍 '도쿄R부동산', 공적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R부동산' 사례와 함께 직접 참여한 재생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영역이던 건축·부동산·미디어의 융합과 그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도시재생 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오카자키 마사노부(岡崎正信) 대표(주)CRA합동회사)의 '민관협력 도시재생을 위한 중간 조직의 변화'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 민관협력 공유재산 재생 사례로 꼽히는 이와테현 오가르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PPP에이전트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효과적으로 공유재산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오카자키 마사노부 대표는 공적 목적을 지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일으키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도시재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민 총괄 디렉터(주)리노베링)가 '민관협력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현장 전문가 중심의 빈집, 빈 점포 재생 프로그램 '리노베이션 스쿨'의 사례와 도시재생 교육의 전환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서수정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을 좌장으로, 발제자와 청중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발제를 통해 소개된 일본의 민관협력 사례와 사업모델, 독립적인 자금 확충 방안 등 보다 자세한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윤주선

2017년
제1, 2, 3차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법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실무적 관점의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016년 8월부터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를 열고 있다. 지난해 다섯 차례 세미나가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9월까지 3차에 걸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 5일 김주경 소장(오우 재건축사사무소)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공공이 짓는 건축, 기획과 자율 사이에서’를 주제로 하여 참여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단계 기획의 중요성과 공공기관 관계자의 인식 개선,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중재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전문가(활동가)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7월 27일 진행된 두 번째 세미나는 공공건축 및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로, 최근 <건축이 바뀐다>를 출간한 박인석 교수(명지대학교)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건설 중심의 정책과 행정 조직, 방치되는 하급 건축시장 등 공공건축과 국내

건축 산업의 쟁점을 짚어보며 건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3차 세미나는 8월 24일 장기욱 소장(보이드아키텍트)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는 평소 가지고 있는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영주시 노인복지관, 은평구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참여 공공건축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의 발주자와 운영자가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업 기획에서부터 용도, 이용시간, 이용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 조성지원과 업무 내실화를 위해 공공건축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이며,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김수빈

2017년 제2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지난 7월 27일 연구소 7층 중회의실에서 '빈집과 소규모 주택을 활용한 마을재생'이라는 주제로 '2017년 제2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방법론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빈집과 소규모 주택을 활용한 마을재생 전략과 추진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세미나에는 2인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해주었으며, 주제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첫 주제발표는 권혁삼 수석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이 맡아 '소규모주택 정비를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권혁삼 수석연구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실행될 사업 계획을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김미정 대표(㈜두꺼비하우징)가 '공간의 공유와 장소의 재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미정 대표는 빈집을 고쳐 세어하우스의 형태로 재임대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두꺼비하우징(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프로젝트 추진 시 느꼈던 한계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 세어하우스의 유지관리 방안, 공공 프로젝트의 임대료 구조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민경

news